

제7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2021. 4. 7.

증 권 선 물 위 원 회

1. 일 시 : 2021년 4월 7일(수) 14:00~19:54

2. 회의방식 : 온-나라 PC 영상회의

3. 출석위원

도 규 상 위 원 장

이 명 순 위 원

이 상 복 위 원

이 준 서 위 원

박 재 환 위 원

4. 회의경과

가. 개회

위원장이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 후, 2021년도 제7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언함

1) 회의록 보고

- ☐ 2021년도 제5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록 및 제3차 임시증권선물위원회 회의록 보고

2) 안건 심의

- ☐ 의결안건 제75호 『케이디비인프라자산운용(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재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보고자) 지난번 증선위에서 요청하신 자산운용사의 총액인수수료 회계처리 실태 조사결과 대부분 회사는 일시비용 처리하고 있었고 일부 회사에서 이연상각한 사례가 있었음. 이연상각한 펀드의 비중으로 볼 때 케이디비인프라자산운용(주)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음. 금감원 검사국은 혼합자산, 특별자산, 부동산펀드 수탁고가 3조 원 이상인 24개 운용사를 대상으로 총액인수수료 회계처리 실태를 조사하였으며 조사대상 24개 운용사 중에서 2개사는 총액인수가 없었고 22

개사에서 총액인수가 발생했음. 총액인수 발생 22개 중에서 16개사는 모든 펀드를 일시비용 처리했고 케이디비인프라자산운용(주)을 포함해서 6개사에서 이연상각한 펀드가 있었음. 이연상각한 회사들의 사례를 볼 때 1개사의 경우에는 15개 총액인수펀드 중에서 행정지도 이전에는 1개 펀드를 이연상각했고 행정지도 이후에는 행정지도 내용을 감안해서 14개 펀드를 일시비용 처리한 바 있음. 1개사는 7개 총액인수펀드 중에서 이연상각한 펀드가 1개에 불과했음. 또 다른 회사는 19개 총액인수펀드 중 4개 펀드를 이연상각했는데 펀드 만기가 26년에서 28년인데 펀드 설정 초기 3년에 걸쳐서만 이연상각한 바 있음. 이연상각한 회사들 중에서 다른 회사들은 총액인수 펀드 중에 이연상각한 펀드 비중이 14~28%인 것에 반해서 케이디비인프라자산운용(주)의 경우에는 70%로 가장 높았음. 한편, 이번 업계의 회계처리 실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총액인수수수수료 회계처리 방식에 대한 업계의 전반적인 인식을 청취해 봤음. 대다수의 회사들이 회계원칙상 총액인수수수수료를 일시비용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변했고 2017년 7월 감독행정의 내용을 본 건 회계처리에 대한 지침으로 인식하고 있었음. 금감원 검사국도 본건을 회계처리 미준수에 따른 법령 위반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감독행정작용은 업무상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는지 여부에 대해 보조적인 판단근거로서 감안한 것임. 마지막으로 운용사 별로 제각각 원하는 방식에 따라서 펀드 회계처리방식을 선택할 경우 시장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본 건이 조치될 경우 회계처리방식에 대한 업계의 혼란을 줄이고 시장에 일관된 시그널을 주어서 업계 전체적으로 적정한 회계처리방식이 정착되는 효과가 있을 것

으로 기대됨.

※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 (진술인) 지난번 증선위에서 요구하신 회계기준원 신속질의 회신의 의미와 케이디비인프라자산운용(주)의 총액인수수료 회계처리원칙이 어떤 것이며, 그 원칙을 바꾼 경위가 무엇인지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음. 먼저 저희가 회계기준원 신속질의 회신의 의미를 확인해 본 결과 회계기준원 질의회신은 신속질의, 정규절차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되는데 신속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회계처리방법 질의에 관한 비공식 절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였음. 회계기준원의 신속질의 회신은 회계기준원 직원의 개인적인 견해에 불과하며 정규절차 접수건 중 질의회신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결된 답변만 공식의견으로 인정된다고 저희는 파악을 하였음. 두 번째로 회사의 회계처리 원칙과 변경 경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음. 2018년 12월4일 계약 설정된 KIAMCO독일풍력펀드까지는 수익-비용 대응원칙 등 회계처리의 원칙에 따라서 이연상각 방식으로 처리했었는데 당시 다수의 자산운용사들이 총액인수수료에 대해 이연상각 방식으로 회계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다만, 정확한 회사명은 해당 회사의 영업 비밀적 측면과 본 건과 같은 제재가능성 때문에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려운 점이 있음을 양해하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이연상각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하다가 2018년 하반기에 일부 자산운용사들이 총액인

수수수료를 일시비용으로 처리하는 사례를 확인하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판매와 연관된 자문수수료에 대해 일시비용 처리하도록 한 2017년 7월18일 감독행정내용을 이유로 회계처리를 변경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음. 회사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 검토와 고민을 했고 이연상각 방식에 대해 특별히 문제는 없으나 다른 회사 사례와 혹시라도 감독행정 내용이 적용될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2018년 12월 KIAMCO 아부다비캠퍼스 2호 펀드부터는 일시비용으로 회계처리를 바꾸어서 적용해 왔음.

- (위원) 일단, 금감원에서 오늘 추가보고해 주신 ‘업계 총액인 수수료 이연 상각 사례’를 보니 조금 애매한 것 같음. 2017년 7월에 행정지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금감원의 행정지도 내용을 정확하게 업계에서 인식을 하고 판단을 했다면 이연상각이 아닌 일시비용화 시켰을 것 같은데, 물론 전체 조사한 펀드의 한 10% 정도 밖에 해당이 안 되지만 그래도 여전히 상당히 많은 것으로 케이디비인프라자산운용(주)을 제외한 5개사에서 계속 이연상각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적시되고 있음. 특히, A사 같은 경우에는 감독행정 전에 3펀드 중에 2펀드를 이연상각했고 감독행정 이후에도 여전히 11개 펀드 중에 2개 펀드를 이연상각하고 있음. 나머지 B사, C사, D사, E사도 마찬가지임. 그래서 2017년 7월에 행정지도한 것이 업계에서 정확하게 작동을 했다면 그런 이연상각이 없었을 것 같은데 여전히 많은 회사에서 이연상각을 한 건에 대해 금감원 설명을 요청드립니다.

- (보고자) 저희 감독행정 이후에 이연상각한 건들이 말씀하신

대로 발견된 것은 맞음. 다만, 해당 건들을 보면 이연상각한 펀드의 개수가 작거나 또는 담당자 교체 등으로 미처 인식하지 못했다고 회사들은 소명을 하고 있음.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건들에 대해서는 총액인수수료 회계처리가 적정히 되도록 정착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위원) 과거 금감원 행정지도가 나간 이후에는 특정 건에 대해서 업계에서 인식을 하고 준수하는 것이 일반적인 통례로 이해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연상각을 한 회사들이 많지는 않지만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봤을 때 과연 행정지도가 제대로 작동을 했는지에 대해 의문임. 6개 운용사를 제외한 나머지 16개사는 전부 일시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16개사가 전부 일시비용 처리한 것이 감독행정 前인지? 後인지?

- (보고자) 전·후에 걸쳐서 다 하고 있었음.

- (위원) 행정지도 전에도 일시비용 처리하고 있었다면 일시비용 처리하라는 것에 대한 행정지도가 시장에서 작용이 안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임. 예를 들어서 16개사가 감독행정 전에는 이연상각을 하다가 감독행정 후에 일시비용 처리를 했다면 납득이 되지만, 16개사의 일시비용 처리한 그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 (보고자) 행정지도 이전에는 20개 펀드였고 행정지도 이후에는 137개 펀드였는데 전부 일시비용 처리를 했었고 이 부분에 대해 업계의견 청취 결과로는 회계원칙상 총액인수수료는

일시비용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미 인식을 하고 있었던 상태였고 감독행정으로 인해서 또 하나의 명확한 지침이 주어진 것으로 인식을 했다고 업계에서는 얘기하고 있음. 금감원 나름대로 감독행정작용 이후에 2019년 12월에 자산운용업계 준법감시인 간담회에서도 본 건 지적사례와 함께 감독행정작용을 업계에 공지하면서 앞으로 총액인수수료 회계처리에 대해 주의해 줄 것을 촉구하는 등 계속 주지시킨 바 있음.

- (위원) 2017년 7월 행정지도가 금감원에서 전체 자산운용사에 대해서 '부동산·특별자산펀드 등 자문수수료 지급관련 내부통제 보완 필요사항 통보'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2017년 7월 행정지도의 내용인지?

▶ (진술인) 맞음.

- (위원) 거기에서 얘기한 자문수수료를 업계에서는 총액인수수료가 자문수수료의 일부로 인식을 하고 있으셨는지?

▶ (진술인) 저희 회사의 경우에는 자문수수료와 총액인수수료는 별도의 수수료라고 생각을 했음.

- (위원) 그러면 2017년 7월의 행정지도에 나온 명칭인 자문수수료가 총액인수수료와 동일한 개념이 아닌지?

▶ (진술인) 저희 회사의 경우에는 여기 '자문수수료'에는 '구입에 직접 관련이 있는 지출로 볼 수 없으므로'라는 단

서가 달려 있었는데 저희는 투자자산과 직접 관련 있는 지출로 보았기 때문에 이 해석과 회사 내부 해석은 좀 다르게 했었음.

- (위원) 다르게 해석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오늘 제출한 추가자료 내용을 보면 '당사의 총액인수수수수료 회계처리 원칙과 변경 경위'라고 해서 '2018년 하반기 일부 자산운용사의 총액인수수수수료 일시비용 처리 사례를 확인하여 이연상각 방식에서 일시비용으로 바꾸었다.'고 하셨음. 그 이유를 보면 '판매와 연관된 자문수수료에 대하여 일시비용 처리하도록 한 2017.7.18. 감독행정 내용을 이유로 정책 변경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라고 적어 놓으셨음.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과 정반대의 개념 아닌지? 처음 말씀하신 것은 자문수수료와 총액인수수수수료가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고 하셨는데 2018년에 케이디비인프라자산운용(주)에서 이연상각하고 있던 것을 일시비용 처리한 이유가 다른 자산운용사들이 자문수수료에 대해 일시비용 처리하도록 한 감독행정내용을 이유로 정책 변경을 하고 있어서 바꾸었다는 것으로 지금 앞뒤가 맞지 않은 것 같음.

▶ (진술인) 저희의 경우에는 행정지도가 왔을 시점에서는 총액인수수수수료가 해당 안 되었던 것으로 내부적으로 판단 하였던 것임. 다만, 2018년 하반기에 타사의 경우에는 저희와 다르게 해석을 하고 변경한 것들이 확인되어 저희의 경우에도 의사결정을 바꾼 것임.

- (위원) 그러면 총액인수수수수료가 자문수수료의 일부라고 한

것에 대해서 케이디비인프라자산운용(주)은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자산운용사는 해당된다고 파악한 것 같은 의미인지?

▶ (진술인) 맞음. 저희가 그것을 파악하게 된 시점은 2018년 하반기였음.

○ (위원) 다수의 자산운용사가 2018년 12월4일까지 총액인수수료에 대해 이연상각을 했다고 하면서 ‘다수의 자산운용사’라는 얘기가 나옴. 다수의 자산운용사가 그 당시에 이연상각 방식으로 회계처리했다고 하셨는데 회사명은 이야기할 수 없겠지만 파악하신 그 다수가 몇 개 정도나 되는지?

▶ (진술인) 자산운용사로는 최소한 3개 이상은 저희가 직접 유선상으로 확인했고, 펀드 관련된 업계가 자산운용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관련 업계도 있는데 그런 업계를 통해서도 확인을 하였음.

○ (위원) ‘다수의 자산운용사’라는 의미는 정확하게 몇 개 자산운용사인지?

▶ (진술인) 저희가 자산운용사 확인한 것은 3개 이상임.

○ (위원) 2018년 12월4일까지는 이연상각을 하다가 다른 자산운용사의 상황을 봤더니 일시비용 처리하는 것을 보고 그다음부터는 일시비용 처리했다고 적시를 하셨음. 12월4일과 10일 사이의 시차는 6일 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그 6일 만

에 의사결정이 확 바뀌었는지?

▶ (진술인) 그 당시에 6일 만에 의사결정을 한 것인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이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6일 만에 의사결정을 했다는 의미는 아님. 기존에 이연상각 처리할 때도 일시비용 처리 가능성에 대한 이슈는 있었으나 저희는 이연상각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해 왔던 것이고 다른 회사 사례 조사를 통해서 그 판단을 바꾸게 된 것이지, 그전부터 이 회계처리 이슈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은 아님.

○ (위원) 제가 금감원과 금융위 측에 질문을 좀 드리겠음. 자본시장법 제240조제1항을 보면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2항에는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마 한국회계기준원에 위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자본시장법 제240조의 회계처리기준이라는 것을 한국회계기준원에서 정한 회계처리기준을 말하는지?

- (보고자) 맞음.

○ (위원) 그러면 은행권의 대출취급수수료와 보험사 신계약비 이런 것도 자본시장법에서 이야기하는 이 회계처리기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인지?

- (보고자) 그렇지 않음.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만 해당됨.

○ (위원) 개념에 혼돈이 있어서 그러는데, 한국회계기준원에서

제정하는 회계처리기준이 있을 것이고 금융위나 금감원의 각 소관 파트별로 각자 자기 업무영역별 회계처리기준이 따로 있는지?

- (보고자) 그러함.

○ (위원) 그러면 자본시장법 제240조의 회계처리기준은 무엇인지?

- (보고자) 한국회계기준원에서 정한 기업회계기준서 제5003호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을 의미함. 다만, 해당 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회계처리의 일반 원칙을 따르게 되어 있고, 동 건에 대해서는 회계처리의 일반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조치를 하는 것임. 그리고 보험사 신계약비 같은 경우에는 개별 계정과목에 대해서 해당 권역의 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보험사 신계약비의 경우에는 보험업 감독규정에서 이연상각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회계처리기준을 정하고 있음.

○ (위원) 감독 규정상 그 기준에 위배될 때는 처벌조항이 있는지?

- (보고자) 있음.

○ (위원) 회계처리기준에 따라야 되고 그 위반으로 인해서 과태료를 논의하고 있는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적인 입장이 무엇인지 받아보시기 바람. 금융위도 한국회계기준원에 공식적으로 입장을 의뢰하여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입장이 무엇인지 받아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보고자) 한국회계기준원 관련해서 금감원에서 확인한 결과 한국회계기준원의 질의종류에는 2가지가 있음. 신속질의가 있고 정규질의가 있는데 신속질의 같은 경우에는 회계처리기준이 명확한데 개별 실무 적용에 있어서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때 답변하는 것이고, 정규질의를 광범위한 여러 회사라든지 회계처리가 많이 발생하는 사례에서 한국회계기준원에서 질의회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공식적인 답변을 줄 수 있는 건에 대해서 정규질의를 거쳐야 함. 저희가 한국회계기준원에 본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서 어떤 질의를 거칠 것인지를 요청한 결과 이 정도 사실관계와 회계처리기준이 있는 상태에서는 신속질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답변을 받아서 저희가 신속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은 것임. 그래서 정규질의를 거칠 수가 없는 성격의 질의였기 때문에 신속질의를 거친 것이고 그 답변이 비록 한국회계기준원의 질의회신위원회를 거친 기관차원의 공식의견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한국회계기준원의 회계처리 담당자가 답변한 것이기 때문에 의견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 (위원) 이와 관련해서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적인 입장을 받아주시기 바람.
- (보고자) 정규질의를 하면 한 달 이상 소요된다고 하고 있음. 사실 정규질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증선위가 한국회계기준원보다 상위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반드시 구속될 필요가 없다는 점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 (위원) 금융위원회가 한국회계기준원에 위탁을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는 관리를 하고 있는 곳이 한국회계기준원이기 때문에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적인 입장이 필요하다는 생각임. 그다음에 한국회계기준원에서 모호한 입장을 가졌다면 이 회계처리기준이 위반이 분식을 했다는 판단은 누가 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런 해석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금융위와 금감원에 있는 것인지? 증선위나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말고 금융위나 금감원 중에 누가 가지고 있는지? 제가 하면서 늘 느끼는 것이 기업에 대한 부분은 명확한데 운용기관 쪽으로 오면 대단히 혼란스러운 측면이 많이 있음. 특히, 자본시장과 관련된 기관의 경우에는 증선위가 동일하게 관할하다 보니 혼재되어 있음. 은행과 보험은 별도의 법적근거를 가지고 규제와 제재를 하고 있는데 이쪽의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혼돈스럽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명확하게 볼 필요가 있음. 앞으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면 우리도 감독행정이라는 정책의 의지를 표명했을 때 과연 그것이 위반되었을 때 제재를 알 수 있느냐, 그것은 법적으로 따져볼 문제임. 이 부분은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있기 때문에 한국회계기준원의 입장을 금융위와 금감원에서 공식적으로 받아보시기 바람. 그래서 앞으로 이 건과 관련한 회계처리가 어떤 것이 맞는지 분명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위원) 이 자료는 금감원에서 정리한 자료인데 제목이 ‘케이디비인프라자산운용(주) 의견진술 요약 및 검토의견’임. 중간쯤에 보면 ‘위원의 행정지도에는 총액인수수수료가 일시

비용 처리 방침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음. 그런데 뒤에 금감원의 의견을 보면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지가 않음.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면 '위원의 행정지도에는 총액인수수료에 일시비용 처리 방침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였으며' 이렇게 회사 측은 주장을 하는데 금감원 측,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 (보고자) 감독행정작용이 나갈 때 그 문구에는 총액인수수료라는 것이 포함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명확하다고 저희가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음.

○ (위원) '대출취급수수료에 관한 기준은 최근 이연상각 방식으로 변경된 바 있음.'이라고 적시를 하셨는데 이 최근이 언제 인지?

- (보고자) 2020년 6월임.

○ (위원) 대출취급수수료에 관한 기준이 최근에 이연상각 방식으로 변경됐는데 이것이 본 안건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 (보고자) 그것은 본 건 감독행정작용 중에 일부 내용이 한 번 변경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그 내용을 정확히 말씀드릴 필요가 있어서 포함을 시킨 것임.

○ (위원) 회사의 입장에서 해석을 해보면 앞부분은 불명확하였기 때문에 지금 적용하는 것이 문제라는 취지 같고, 뒷부분은 최근에 이것이 문제가 됐는데 과거의 것은 불명확했기 때문

에 문제 삼으면 안 된다는 취지 같음.

- (위원) 2017년 7월 감독행정이 있었는데 지금 회사 측에서 진술하는 것을 보면 감독행정의 문구만으로는 펀드의 총액인수수수수료 회계처리와 관련해서 일시비용 처리하는 것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회사 쪽 입장인 것이고, 금감원에서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명확하게 총액인수수수수료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았지만 누가 보더라도, 특히 감독당국 입장에서 볼 때는 총액인수수수수료를 일시비용 처리하는 것이 명확하다고 하여 제재조치안의 근거로 잡은 것인데 이 건과 관련해서 당시 2017년 7월에 감독행정을 하게 된 경위와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자) 2016년 5월에 저희가 부동산·특별자산펀드 운용관련 건전성 검사를 했었고 각종 언론에서 판매사에 제공되는 과도한 자문수수료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음. 그래서 저희가 부동산펀드 운용과정에서 자문수수료의 불투명한 지급 관행에 따라서 운용비용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 펀드회계처리의 성과측정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판매사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펀드투자자 몫을 빼는 갑질의 수단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서 부동산펀드의 자문수수료 지급내역을 전수점검한 바 있음. 전수점검한 결과 자문수수료 지급에 대한 내부통제가 미흡하였고 내부통제의 내용 중 하나는 자문수수료를 지급할 때 관련 증빙을 명확히 갖추지 않거나, 불확실한 내용으로 자문수수료를 지급하거나, 자문수수료에 대한 회계처리에 대해서 불명확하는 등 3가지 내용이었음. 그리고 회계처리에 대해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구입에 직접 관련이 있

는 지출로 한정이 되어야 하지만 투자자 모집 주선이나 총액 인수수수료 등 판매행위와 연관이 있거나 연관 있는 수수료 까지 자산에 가산하는 부분이 전수조사 결과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모집과 관련된 비용은 전부 다 일시비용 처리하도록 감독행정작용을 한 것임. 다만, 여기에서 펀드투자의 모집주선 등과 관련된 자문수수료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저희가 감독행정작용을 위해서 전수점검을 할 때는 그 자문 수수료는 금융자문수수료였고, 총액인수수료나 모집주선수수료 등을 금융자문수수료의 일종으로 보고 그 표현을 자문 수수료로 한 것임. 그래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총액인수수료의 회계처리에 대해서 이미 감안을 한 상태였고 감독 행정작용에 나온 본문상에 명확하게 총액인수수료라고 기재하지 않은 부분은 있음. 따라서 저희가 검사결과라든지, 여러 가지를 종합했을 때 당시에 이런 감독행정의 내용과 총액 인수수수료가 업계에서 이슈가 됐던 사실로 비추어봤을 때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고 판단해서 조치를 건의드리는 것임.

- (위원) 엄밀한 회계처리의 목적이라기보다는 감독정책적인 목적이 더 강했다고 이해하면 되겠는지?
- (보고자) 자문수수료 지급 실태를 전수점검한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되었고 그 중에 회계처리가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음.
- (위원) 엄밀한 회계처리라는 것이 그 당시 감독행정의 배경으로 충분히 작용했다면, 그와 관련해서 어떤 것이 올바른

회계처리인지를 회계기준원에 어떤 자문을 받았든지, 아니면 금감원 내부의 자문을 받았든지 하는 노력의 흔적이 보여야 되지 않겠는지? 2017년 7월 당시에 그런 것이 있었는지?

- (보고자) 당시에 내부적인 회계부서에 별도의 확인을 했는지는 저희가 미처 확인하지 못했음. 다만, 금감원 내의 관련 부서에서 회계사들이 있었고 이전에 회계업무를 하던 직원들도 있었고 그리고 본 건 총액인수수료의 회계처리 방식에 대해서는 사실 별다른 이견이 없었음. 일시비용 처리한다는 것에 대해서 별다른 이견을 가질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일시비용 처리하는 것이 당연한 회계처리라고 인식하고 감독행정작용을 한 것임.
- (보고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펀드회계처리라고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회계기준원에 제5003호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펀드회계처리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감원에 기업회계와 관련된 회계심사국이나 여러 회계 관련 부서가 있는데 그쪽은 기업회계 쪽이어서 펀드회계 쪽과는 관련성이 없고 실제 저희 부서의 공인회계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안건을 만들었던 것이지, 해당 회계 관련된 부서에 요청하고 그렇게 해 온 사례가 없음.
- (위원) 제가 볼 때 그 당시 배경이 감독정책적인 목적이었느냐 아니면 엄밀하고 정확한 회계처리가 목적이었느냐 하는 동기부분이 지금 판단하는 것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함.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조금

더 명확하게 답변해 줄 수 있으면 더 검토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음.

- (위원) 금감원 자료 ‘케이디비인프라자산운용(주) 의견진술 요약 및 검토의견’을 보면 ‘본 건은 행정지도 위반에 기인한 것이 아니며,’ 그리고 그 아래에서 ‘본 건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인해 조치하는 것이므로 감독행정작용은 본 건 위반여부 판단시 보조적인 역할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임. 감독행정작용이 보조적인 역할이라고 했는데 보조적인 역할이 무슨 역할을 의미하는지? 쉽게 얘기해서 이것이 행정지도를 의미하는지?

- (보고자) 저희는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를 하면서 행정지도 내용까지 이행했는지의 여부를 참고적으로 다 확인했던 사항임.

-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감독행정 작용, 금융감독행정 작용, 행정지도라는 용어가 혼용되고 있음. ‘감독행정작용의 일환인 행정지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닌지?

- (보고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위원) 그렇다면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음. 금감원 자료 중 ‘KDB인프라자산운용 조치안 보완사항 증선위 보고’라는 자료를 보면 ‘업계 총액인수수료 이연 상각 사례’가 적시되어 있음. 그 내용을 보면 ‘17.7월 감독행정 前’과 ‘17.7월 감독행정 後’가 나와 있고 그 아래 보면 ‘상기 6개 운용사

를 제외한 16개사는 전부 일시비용으로 처리'라고 되어 있음.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A사(14개 펀드 중 4개를 이연상각): '17년 행정도 前에는 명확한 지침이 없어 이연상각한 사례가 있었으나, 감독행정後 일시비용 처리하고 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의미는 행정지도가 지침이 되었다는 의미임. 그리고 옆에 있는 '감독행정後 일시 비용처리하고 있음. 다만 행정지도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행정지도後'가 아니라 '감독행정작용의 일환인 행정지도後' 이렇게 하는 것에 어떤 입장인지?

- (보고자) 금융규제 운영규정에서 정의하는 것이 조금 차이가 있다 보니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음.
- (위원) 감독행정이라는 것은 상당히 포괄적인 것임. 금융행정의 내용 중에 금융감독행정이 있는 것이고, 행정이니까 행정의 일환인데 감독행정의 일환이 행정처분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음. 그중 하나가 행정지도이고 이것은 전부 행정지도임. 그렇게 해야 이것이 전체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임.
- (위원) 회사 측의 주장을 정리하면 “2017년 7월18일 그 이전에는 문제 삼지 않다가 2017년 7월18일 행정지도 그 이후에는 왜 제재하느냐?” 하는 것 아닌지?
- ▶ (진술인) 그런 취지는 아님. 그 당시에 명확한 기준이 없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음. 행정지도 전·후도 그렇지만 행정지도가 나오고 나서도 업계에서 이 행정지도를 시작으로 총액인수수료를 이연상각했던 회사는 다 일시비용으

로 진행되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임. 회사에서는 행정지도가 총액인수수료에 대해 적용되는 것을 2017년 7월 당시에는 인식하지 못했던 부분임.

- (보고자) 행정지도와 감독행정작용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쓰이는 용어가 아니다 보니 기존에 사용하던 행정지도라는 것이 여러 가지 용어 면에서 편리해서 그렇게 기재한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함.
- (위원) 정리하면 행정지도가 나갔는데 받아본 사람이 해석하는 것과 보낸 사람이 얘기했던 것이 다른 것 같고, 두 번째는 행정지도의 성격도 중요함. 물론 상대방은 지켜야 되겠지만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별도로 제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보고자) 사실 행정지도 및 감독행정이 무엇이냐의 논란이 있어서, 저희 금융위에서는 총리훈령으로 행정지도와 감독행정을 구분해서 정의하고 있고 명확하게 감독행정작용은 행정지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구분을 하고 있음. 그래서 아까 금감원 팀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지도는 자발적인 협력에 기초하는 것이어서 강제력이 없는 것이 맞는 말씀이나, 감독행정작용은 법규에 있는 것인데 그것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침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법령을 어떻게 지켜라 하는 부연설명을 하는 성격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음. 그렇기 때문에 법령 위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고 어떤 행동이 법령을 지키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지침을 준 것이 감독행정작용이라

고 해석되는 것임. 금감원 자료나 회사 측 자료를 보면 행정지도와 감독행정이 혼용되어 나오는데 여기에서 그 모든 용어는 '감독행정작용'으로 통일시키는 것이 맞음. 그리고 저희가 행정지도와 감독행정작용은 내부적으로 연번을 부여해서 따로 관리하고 있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음.

- (보고자) 본 건의 쟁점은 감독행정작용을 준수했느냐의 여부가 아니라 총액인수수수료를 어떻게 회계처리했느냐의 여부임. 저희 금감원에서는 총액인수수료는 모집과 관련된 비용이기 때문에 일시비용 처리해야 된다는 것이고 피조치자는 모집과 관련되기 때문에 일시비용 처리가 맞으나 본 건은 프로젝트 펀드이기 때문에 자산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자산의 경제적 효익기간 동안 이연상각해야 된다는 것이 본 건의 쟁점이라고 생각함.
- (보고자)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면 저희가 자문수수료 지급실태를 2017년 7월에 점검한 다음에 회계처리가 너무나 제각각이어서 모집과 관련된 비용을 일시비용 처리하도록 다시 한 번 안내를 한 바 있고 이것에 대해서 피조치자는 “그 안내를 보고 내가 명확하게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그런데 저희 금감원 입장에서는 해당 내용에 대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으면 회계처리를 적정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또 한 번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총액인수수료가 자산의 구입과 관계없이 모집과 관련되어 있다면 일시비용 처리해야 하고 거기에 더해서 한 번 더 주의를 기울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

에 그 부분을 양정에 감안한 것임.

- ▶ (진술인) 지금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회사 쪽에서도 당시의 회계처리기준이 회사가 맞고 금감원이 틀리다는 식의 논리접근이 아님. 일단, 2017년 7월 행정지도 이후 2018년말까지 1년 조금 넘는 기간 동안의 위반행위인데 이 부분에 대해 당시 회사가 조금 더 빨리 행정지도의 내용이 총액인수수료도 포함되는 것이라고 파악하고 만약 바꾸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일도 생기지 않았을 것인데 다만 회사가 당시로서는 그 부분을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고려해 주셨으면 함.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반드시 본 건을 제재라는 수단이 아니더라도 회사로서는 감독 당국의 정책방향을 언제든지 충분히 따를 의사가 있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임. 그리고 금융기관검사 및 제재규정 과태료 부과기준을 보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위반행위로서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면제할 수도 있다는 조항도 있고, 본 건과 같이 두 개 이상의 동일 종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황 등을 고려해서 예정금액총액의 50%까지 감경할 수 있다는 과태료 부과기준도 존재하는 점 등을 감안하셔서 회사에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 진술인이 퇴장함.

- (위원) 유권해석과 감독행정작용은 어떻게 다른지?

- (보고자) 유권해석은 내용을 해석하는 정도에 머무르는 것 같고 감독행정작용은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지침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는 것으로 차별적으로 이해가 됨.
- (위원) 법령에 근거가 없이 새로운 권리의 의무관계를 창설할 수는 없는 것인지?
- (보고자) 둘 다 없음.
- (위원) 새로운 권리를 창설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지만 상대방의 자발적 협조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행정지도가 되는 것으로 그것은 구속성이 없는 것이고, 다만 행정작용은 절차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 아닌지? 지금 이 건은 행정작용이라기보다는 유권해석 같은데 이미 법상 의무가 주어져 있어 회계처리기준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되어 있고 그 회계처리기준에 맞는지 여부와 관련해서 세부사항들을 해석해서 내려다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유권해석이나 감독행정작용을 다 등재하고 있는지?
- (보고자) 지금 연번을 기록하고 있음.
- (위원) 그렇다면 이 건도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지?
- (보고자) 금감원에서 저희한테 보고도 하고 금감원에서 기록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위원) 한국회계기준원의 입장을 한 번 받아보고 그것을 토대로 2017년 7월에 했던 공문의 성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공문의 성격에 따라 준수 의무가 바로 발생을 한 것인지, 금감원이 지도했던 내용들이 구체성을 갖고 있었는지, 그런 것들이 남은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한국회계기준원에 이야기를 해서 공식적인 의견을 빠른 시일 내에 받아보시고 진술인 측에서는 신속질의 회신이 개인적인 견해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개인적인 견해라고 격하시킬 수 있는지?

- (보고자) 신속질의 회신은 한국회계기준원 담당자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답변을 해도 될 만큼 경미한 사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음. 정규절차 질의를 거칠 사항도 아니고 회계처리 기준상 명확하기 때문에 신속질의로도 충분히 답변이 가능한 수준의 회계처리방식에 대한 답변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음.

○ 보류하는 것에 동의함

⇒ 보류*함

* 만장일치로 보류하는 것을 의미함(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의결안건 제84호 『□□□□□□(주) 등 116개사 주식에 대한 부정거래행위 조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이분은 평소 기부활동 같은 것을 많이 하는지?

- (보고자) 유튜브에서는 본인이 기부천사라고 자랑하고 있고 실제 그런 화면을 영상으로 과시하고 있었음.

○ (위원) 신문기사에 나왔는데 유튜브나 주식카페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행위를 한 분들에 대해 자조단에서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했다고, 그런데 관련된 것이 □□□□□□(주)의 A씨와 △△△△△△△△△△ 관련된 B씨 말고는 없는지? 작년에 시장이 활황이어서 유튜브나 주식카페를 통해 혹세무민(惑世誣民)한 분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이 2건이 전부인지?

- (보고자) 현재는 그러함. 일단, 한국거래소에서 저희에게 통보된 사건은 바로 조사에 착수해서 집행한 사건이고, 향후에도 이런 사건을 계속 조사해서 고발할 예정임.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만장일치로 원안의결을 의미함(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의결안건 제85호 『□□□□□□(주)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행위 등 조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이 사람이 실제로 주식을 처분해서 수익실현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무리하게 주식투자를 했는지?

- (보고자) 그 부분에 대해서 문답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물어 봤는데 회사 경영참여 목적도 아니고 다만 2005년경부터 주식을 매집해 왔는데 그 이후에 주가가 하락하다보니까 평균매수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매집했다고만 얘기를 하고 있음.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 의결안건 제86호 『(주)□□□□□□□□□□ 주식에 대한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조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 의결안건 제87호 『□□□□□□□□□□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행위 조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B씨는 100개 넘는 종목에 대해서 부정거래행위를 했

는데 A도 비슷하게 유튜브와 주식카페를 하고 있는데 A는 이 1건 밖에 없음. 다른 종목은 없는지?

- (보고자) 한국거래소에서 통보되어 온 것은 1건이었음. 추가적인 종목 여부는 수사과정에서 더 나올 수도 있는데 자본시장조사단 결과로는 다른 종목은 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88호 『(주)□□□□□□□□□□□□□□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행위 조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89호 『□□□□□□□(주)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행위 등 조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보호예수 관련해서 예탁결제원 직원하고 E-mail 주고 받은 것은 어떤 상황인지?

- (보고자) 예탁결제원에 실제 A씨가 보호예수를 신청한 적이 있는지를 공문을 통해서 요청한 결과,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통보받았음.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 의결안건 제90호 『(주)□□□□□ 주식에 대한 부정거래행위 등 조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 의결안건 제91호 『(주)□□□□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행위 등 조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보고안건 제22호 『(주)□□□□□ 주식에 대한 부정거래행위 등 긴급조치 결과보고』, 제23호 『(주)□□□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행위 긴급조치 결과보고』, 제24호 『(주)□□□□□ 주식에 대한 부정거래행위 등 긴급조치 결과보고』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하여 서면보고로 갈음함.

○ 각각 원안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각각 원안접수함

- 의결안건 제92호 『한국거래소 정관 일부변경 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한국거래소 조직 내부에 청산결제본부와 청산결제위원회라는 것이 별도로 만들어지는지?

- (보고자) 맞음. 청산결제본부가 조직적으로 만들어지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구조임.

○ (위원) CCP와 관련해서 다른 나라 동향들은 어떠한지?

- (보고자) 대부분 CCP를 별도 법인화해서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세계 유수의 거래소 중 CMB만 내부조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임.

○ (위원) 청산결제본부가 만들어지면 조직을 어떻게 구성하려고 하는지?

- (보고자) 현재 CCP 기능을 하고 있는 부서가 파생상품시장본부 내에 있고, 거기의 CRO가 3개 부서를 관장하고 있음. 동 3개 부서를 의사결정의 독립성을 위해서 별도 본부로 개편하는 것이고, 새로운 조직이나 인력의 증설은 없을 예정임.

○ (위원) 그런데 청산결제위원회의 구성이 5인으로 되어 있고 전문가 3인을 이사회에서 비상임으로 선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어떤 사람들로 채워지는지?

- (보고자) 청산결제 업무와 관련해서 10년 이상의 경력이나 전문 학식을 가지고 있는 학계에 계신 분과 변호사, 업계의 전문가 이렇게 각각 3개의 직역(職域)에서 전체적으로 임원 3명으로 구성할 예정임.

○ (위원) 청산결제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

- (보고자) 의사결정의 탄력성을 위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소수의 위원들이 집중적으로 논의할 수 있음.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나. 폐회선언

위원장이 2021년도 증권선물위원회 제7차 회의의 폐회를 선언함.

(19시54분 폐회)